

2026년도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 소관

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검 토 보 고 서

【 산 업 통 상 부 소 관 】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지 식 재 산 처 소 관 】

일 반 회 계

2026.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박 희 석

목 차



산업통상부 소관

I. 개 요

1. 총 괄	1
(1) 편성배경	1
(2) 편성 기본방향	1
2. 추경안 편성에 따른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3
(1) 총괄	3
(2) 일반회계	5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

II. 검토의견

1. 무역보험기금출연(일반회계): 보증·보험 공급확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지원방안 마련 필요	8
2. 수출지원기반활용(일반회계): 신속한 바우처 선정·지원 및 지사화사업 운영계획 마련 필요	16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일반회계):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여건 점검 및 지원범위 보완 필요	26
4.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일반회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재추계 필요	31
5.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일반회계): 추경 편성 요건을 고려한 사업집행 관리 철저 필요 등	37
6.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일반회계): 유사 사업 간 과제의 차별화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43
7. 산업단지환경조성(지특회계): 추경 편성 요건을 고려한 사업추진 철저 필요	47
8. 지역산업위기대응(지특회계):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강화 필요	56
9. 석유비축사업 출자(에특회계): 석유 비축 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필요 등	66
10.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에특회계): 석유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등 사업추진 철저 필요	73



I. 개 요

1. 총 괄	83
(1) 편성배경	83
(2) 편성 기본방향	83
2. 추경안 편성에 따른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84
(1) 총괄	84
(2) 일반회계	85

II. 검토의견

1.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일반회계): 정품인증시스템의 보안성 관리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86
--	----

산업통상부 소관

I. 개 요

1. 총 괄

(1) 편성배경

중동전쟁 등으로 글로벌 유가 및 물류비가 급등하여 수출기업의 어려움과 함께 민생 경제의 활력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에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2) 편성 기본방향

정부의 편성 기본방향은 ① 고유가 대응, ② 민생 안정,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며, 이에 산업통상부는 총 13개 사업, 9,241억원(총지출 기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역보험기금 출연 1,000억원, 수출 바우처 지원 등 수출지원 기반 활용 330억원, 석유화학·철강화학 맞춤형 지원 70억원 등 피해 기업·산업 지원을 위해 총 1,459억원을 증액하였고,

암묵지의 데이터화를 통한 제조공정 혁신 800억원, 데이터센터 실증 140억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총 1,14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한 수입비용 지원 4,695억원, 비축유 구입과 석유 비축물량 확대 1,584억원, 희토류 재자원화 생산기반 마련 81억원, 요소 수입선 다변화 39억원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6,642억원을 증액하였음.

제1회 추경안 증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사업명	'25년 예산	'26년 본예산 (A)	'26년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
일반 회계	무역보험기금출연	380,000	70,500	170,500	100,000	141.8
일반 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180,171	181,074	214,074	33,000	18.2
일반 회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34,606	341,429	347,334	5,905	1.7
일반 회계	제조암묵지기반 AI모델개발(R&D)	-	-	80,000	80,000	순증
일반 회계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57,446	56,738	76,738	20,000	35.2
일반 회계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 지원	90,545	135,036	608,431	473,395	350.6
에특 회계	석유비축사업출자	79,901	55,300	213,733	158,433	286.5
에특 회계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5,859	16,314	38,654	22,340	136.9
에특 회계	석유유통구조개선	811	761	2,741	1,980	260.2
에특 회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415,447	76,929	82,929	6,000	7.8
에특 회계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	-	3,777	5,857	2,080	55.1
지특 회계	산업단지환경조성	387,478	409,920	423,920	14,000	3.4
지특 회계	지역산업위기대응	5,165	24,667	31,667	7,000	28.4
합 계		1,947,429	1,372,445	2,296,578	924,133	67.3

* 백만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였음.

자료: 산업통상부(충지출 기준)

2. 추경안 편성에 따른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1) 총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총수입 및 총지출 증감내역을 보면, '26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 9조 4,343억원 대비 9,241억원(9.8%)이 증액되었으며,¹⁾ 총수입은 변동 없음²⁾.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음.

제1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	'26년 예산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B-A)/A
합 계	2,758,640	2,266,504	2,266,504	-	-
일반회계	188,767	175,074	175,074	-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391,744	1,858,213	1,858,213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63,481	81,980	81,980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3,044	66,328	66,328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	-	-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61,604	84,909	84,909	-	-

* 총수입 기준(금융성기금 제외³⁾) 작성, 편의상 기금 수입도 포함하여 세입예산안이라고 표기하였음.
자료: 산업통상부

1)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수입 기준에는 미포함

2) 다만, 내부거래가 포함된 총계 기준으로 무역보험기금 1,0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무역보험기금 : '26년 1회 추경안 총계 기준 수입 58,730억원(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원 증액)

제1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	'26년 예산			
		본 예산(A)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B-A)/A
합 계	10,241,227	9,434,233	10,358,366	924,133	9.9%
일반회계	4,599,858	5,135,073	5,847,373	712,300	13.9%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382,166	813,894	1,004,727	190,833	23.4%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1,822,812	1,954,894	1,954,89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88,616	1,403,763	1,424,763	21,000	1.5%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5,700	6,530	6,530	-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42,075	120,079	120,079	-	-

* 총지출 기준(금융성기금 제외) 작성, 편의상 기금 지출도 포함하여 세출예산안이라고 표기하였음.
자료: 산업통상부

(2)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는 총 7,123억원이 증액되었고, 수출 기업의 비용을 경감하고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에 1,000억원,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 330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에 59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제조공정의 혁신을 위해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에 8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을 위해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사업에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프타, 요소 등의 차질없는 수급을 위해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에 4,73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	'26년 본 예산 (A)	'26년 제1회 추경안 (B)	증감(B-A)	
					%
【일반회계】	1,042,768	784,777	1,497,077	712,300	90.8
무역보험기금출연	380,000	70,500	170,500	100,000	141.8
수출지원기반활용	180,171	181,074	214,074	33,000	18.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34,606	341,429	347,334	5,905	1.7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 개발(R&D)	-	-	80,000	80,000	순증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57,446	56,738	76,738	20,000	35.2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90,545	135,036	608,431	473,395	350.6

자료: 산업통상부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90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 석유수급 안정화를 위해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에 1,584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 석유제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사업에 22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석유 판매정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에 1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그리고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원료 확충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에 60억원,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사업에 20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	'26년 본예산 (A)	'26년 제1회 추경안 (B)	증감(B-A)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12,018	153,081	343,914	190,833	124.7
석유비축사업출자	79,901	55,300	213,733	158,433	286.5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5,859	16,314	38,654	22,340	136.9
석유유통구조개선	811	761	2,741	1,980	260.2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415,447	76,929	82,929	6,000	7.8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	3,777	5,857	2,080	55.1

자료: 산업통상부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총 2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현장에 기반한 데이터센터 실증을 위해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에 1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부가전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에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	'26년 본예산 (A)	'26년 제1회 추경안 (B)	증 감(B-A)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2,643	434,587	455,587	21,000	4.8
산업단지환경조성	387,478	409,920	423,920	14,000	3.4
지역산업위기대응	5,165	24,667	31,667	7,000	28.4

자료: 산업통상부

Ⅱ. 검토의견

1. 무역보험기금출연(일반회계): 보증·보험 공급확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지원방안 마련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무역보험기금출연’(1138-881)은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705억원 대비 1,000억원(141.8%) 증액된 1,705억원으로 편성됨.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추경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무역보험기금출연	80,000	380,000	70,500	170,500	100,000	141.8

자료: 산업통상부

② 보증·보험 공급확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지원방안 마련 필요

정부는 「무역보험법」⁴⁾에 따라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수출금융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

4)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제31조(기금의 조성)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으며, 2026년도 본예산으로 'RG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705억원의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음.

그런데 2월말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해상물류 지연, 선적취소, 운임료 상승 및 할증료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부품·원자재 및 에너지 조달비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한편, 수출대금 회수지연이나 현지 법인·주재원 등의 운영 리스크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3월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 등⁵⁾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실시간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신용보증한도 1.5배 우대 등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⁶⁾,

정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동 사업을 1,000억원 증액편성하고, 기존 무보 순자산⁷⁾ 중 770억원을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총 3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임.

5)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이란 7개국 및 이스라엘

6) 한국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 “무보,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 가동”, 2026. 3. 11.

7) 무역보험기금 경영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배)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전망	
					본예산	추경안
기금총액(A)*	34,118	39,187	47,756	59,388	64,907	65,907
정부출연금	912	500	700	3,800	705	1,705
자체수입	8,668	11,927	14,747	16,427	15,476	15,476
유효계약액(B)	865,524	1,009,241	1,034,558	1,221,073	1,247,577	1,247,577
기금배수(B/A)	25.4	25.8	21.7	20.6	19.2	18.9

* 기금총액: 기금 순 자산

자료: 산업통상부

세부적으로는 ① 중동지역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기업 외에도 물류 지연, 원자재수입 차질 등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긴급지원하고, ② 석유, 광물 등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주요 자원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자금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한편, 운전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현지 법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며, ③ 중남미·동남아 등 대체시장 발굴시 단기수출보험 지원한도를 적극 확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고자 함.

지원유형별 재원배분 및 지원규모(안)

(단위: 억원)

구 분		운용 배수	재원			지원규모		
			추경	자체	소계	추경	자체	소계
① 수출 중소·중견 기업 무역금융 긴급지원	유동성지원	12.5배	230	170	400	2,875	2,125	5,000
	특례지원		130	110	240	1,625	1,375	3,000
	소 계		360	280	640	4,500	3,500	8,000
②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	수입자금 지원		300	220	520	3,750	2,750	6,500
	현지법인지원		90	70	160	1,125	875	2,000
	소 계		390	290	680	4,875	3,625	8,500
③ 대체수출시장 발굴지원		30.0배	250	200	450	7,500	6,000	13,500
합 계		-	1,000	770	1,770	16,875	13,125	30,000

자료: 산업통상부

우선, ‘수출중기 무역금융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비 중동지역 수출 비중⁸⁾은 크지 않은 편이나, 물류지연, 운임상승,

원자재 수입 차질, 수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일
반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광범위하게 과급될 수 있으므로 무
역보험 및 보증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계획에 따르면 중동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수출채권을 담보로 운전자금을 원활하게 확
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거액 수출계약이 성사된 기업⁹⁾에 대해
계약 체결내용, 기술력, 성장가능성 등 非재무항목을 포함하여 종합적
으로 심사하고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등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현재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로 인해 민간금융기관이 운송
리스크, 대금 회수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무보가 공적보증을 통해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여
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중동지역 수출비중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 비중%, 비중%p)

국가 ·지역명	2024년			2025년 1~10월			(b-a)
	금액	증가율	비중(a)	금액	증가율	비중(b)	
전세계	6,836	(8.1)	(100.0)	5,792	(2.3)	(100.0)	(0.0)
중동	197	(4.7)	(2.9)	161	(-1.4)	(2.8)	(-0.1)

자료: 「2025년 수출입평가 및 2026년 전망」, 한국무역협회(2025. 11. 25.)

9) 특례지원시에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매입/포괄매입) 외에도 수입보험(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
망),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기반보험, 단기수출보험에
대해서도 특별한도 등을 지원할 계획임.

다만, 불안정한 현지 정세로 인해 실제 사고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반영하여 보증·보험료율이 현실화되면서 이미 운임료 상승 및 할증료 부과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 무보가 계획하고 있는 보증·보험료 감면¹⁰⁾ 외에도 은행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수출바우처의 보증·보험료 지원범위¹¹⁾를 확대하는 등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과 관련하여, 우선 무보는 주요 자원 수입기업을 위하여 수입보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라 수입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거래선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수입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됨.

사업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원유, 가스 등), 화학원료(나프타 등), 광물 및 주요 금속 업종을 대상으로 수입보험을 공급할 계획인데, 최근 에너지, 원료 및 광물 등의 물가 상승 및 변동성 심화로 인해 수입자금 대출수요 확대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수입보험 가입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10)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중기 유동성 지원’ 사업에 대해 보증·보험료 50% 감면을 지속하고, ‘원자재 확보 수입자금 지원’ 및 ‘대체수출시장 발굴지원’ 사업에 대해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할 계획임.

11) ○ 정산항목: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환변동보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참여기업 사후정산) 대상

○ 정산한도: 무역보험·보증 대분류 기준 협약기간 누계 최대 1천만원(협약 바우처 총액 기준) 이내에서 정산 가능

해상운송 차질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 및 거래불이행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바, 무보가 수입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수입기업의 원자재 조달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3개월간 주요 자원 가격 추이

대상 자원	'26. 1. 2.	'26. 3. 24.	증가율
두바이유 (배럴당)	US\$ 60.2	US\$ 133.6	121.9%
WTI (배럴당)	US\$ 57.32	US\$ 92.35	61.1%
프로판 (갤런당)	US\$ 0.62	US\$ 0.79	27.4%
천연가스TTF (MWH)	EUR 29.00	EUR 54.04	86.3%
나프타 (톤당)	US\$ 488.03	US\$ 850.25	74.2%
철광석 (톤당)*	CNY 794	CNY 824	3.8%

* '26. 2. 27. 톤당 CNY 750.5
자료: TRADING ECONOMICS

아울러 사업계획에는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유가·환율 상승으로 해외 현지 법인의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거나 정상적인 수출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외사업금융보험¹²⁾을 지원하려는 것임.

현지 법인은 현지 생산·조달·판매거점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전초기지이자 국내 본사의 수출입 활동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현지 법인의 유동성 애로를 완화하는 것은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국내 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다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 사업은 새로운 거래선 발굴이나 대체 수입처 확보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 계약조건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제도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보험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코트라 무역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활용 등을 통해 지원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대체수출시장 발굴지원’과 관련하여, 무보는 기존 중동 바이어를 대체한 수입처를 발굴한 수출기업에 대해 한도를 3배 우대하여 단기수출보험을 공급하고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기존 거래가 위축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수출기업이 새로운 거래선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하고, 초기 거래에 수반되는 대금회수 위험을 완화하면서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는 상대방의 신용도, 결제관행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기업이 거래 개시를 주저할 수 있는데, 무보가 보험 인수와 함께 보험료를 감면하여 위험을 일부 분담함으로써 대체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대체수출시장 발굴은 단기수출보험 공급만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신규 거래선 발굴 능력 및 거래 성사 과정에서는 기존 해외 네트워크, 정보 접근성, 거래규모 등에 따라 기업별 활용 여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험한도 우대 및 보험료 감면 외에도 바이어 발굴, 시장성 검토, 물류·통관 컨설팅 등에 관하여 수출바우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¹³⁾.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동 상황에 대응하여 유동성 공급, 공급망 안정화, 대체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3조원 공급할 계획이나, 공급 규모 확대와 함께 보증·보험료 부담 완화 및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신용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효과가 고르게 미치고 보험공급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3) 이에 대해 무보는 자체 네트워크와 정보력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수출중소는 초기 거래선 발굴, 신용확인 등 정보·금융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한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할인(50%)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2. 수출지원기반활용(일반회계): 신속한 바우처 선정·지원 및 지사화사업 운영계획 마련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수출지원기반조성’(1139-307)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해외지사화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현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1,810억 740만원 대비 330억원(18.2%) 증액된 2,140억 740만원이 편성됨.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B-A)	%
수출지원기반활용	91,364	180,171	181,074	214,074	33,000	18.2
통합지원	61,628	150,435	154,312	179,812	25,500	16.5
중견기업 수출 역량강화	25,000	25,000	23,670	23,670	0	0.0
산업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36,050	124,857	130,064	155,564	25,500	19.6
산업바우처	36,050	36,050	47,449	47,449	0	0.0
긴급지원바우처	-	84,672	42,443	67,943	25,500	60.1
관세대응 119	-	4,135	-	-	-	-
K-수출스타 500	-	-	40,172	40,172	0	0.0
통합관리	578	578	578	578	0	0.0
개별지원	29,736	29,736	26,762	34,262	7,500	28.0

자료: 산업통상부

② 중동 수출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바우처 선정 및 지원 필요

내역사업인 ‘통합지원’ 사업은 수출역량을 제고하려는 기업들이 수출 지원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무역장벽 심화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통상애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바우처’¹⁴⁾ 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유형 및 지원요건 등

산업분야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한도 ※ 최소 2천만원
소재·부품·장비	[진입]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평균 산정 기간: 2022~2024년	[진입] 7,500만원 [성장] 1억 500만원 [확장] 1억 5,000만원
그린		
소비재		[진입] 4,500만원 [성장] 7,500만원 [확장] 8,250만원

주: 국고보조율(사업유형 및 단계별 공통) (중소) 70%, (중견) 50%
자료: 산업통상부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2026년 1월초에 마감한 1차 모집 이후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추가로 참여기업을 모집¹⁵⁾할 예정이었으나, 2월말 이

- 14) ○ 지원요건: 중소·중견기업 중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24년 이후 대미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
 - '24년 이후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 미국 외 지역(유럽, 인도 등)에서 통상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 15) '26년 수출바우처 운영 계획(잠정)

구 분	모집시기	모집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산업바우처	'25.12.22.~'26.1.9.	0000개사	수출희망 중소·중견기업	1억원
긴급지원바우처 1차	'25.12.22.~'26.1.9.	000개사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1.5억원
긴급지원바우처 2차	'26.2분기	000개사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1.5억원
긴급지원바우처 3차	'26.3분기	000개사	통상(관세·비관세) 애로기업	1.5억원

자료: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16호)(2025.12.22.)

후 지속되는 중동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 11일¹⁶⁾부터 긴급 지원바우처 2차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동지역 수출실적(2025~2026년 2월) 또는 2026년 수출 계약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중동 수출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물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물류반송비용, 전쟁위험할증료·긴급분쟁할증료, 대체목적지 우회운송비(해상·항공) 및 중동지역 화물 현지발생 지체료를 신규 지원항목으로 신설하고, 확대된 국제운송 지원한도(3천만원→6천만원)를 유지하는 한편, 15개 서비스 유형¹⁷⁾ 중 통상애로 긴급지원 서비스¹⁸⁾ 등 7대 서비스 유형¹⁹⁾에 바우처 총액의 7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임.

그리고 피해가 심각한 기업²⁰⁾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선정하여 조속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4일 기준 44개 기업이 이러한 패스트트랙

16) 신청기간: '26. 3. 11.(수) ~ '26. 3. 31.(화) 18시 까지

17) 기존 14개 바우처 유형(① 조사/일반 컨설팅, ② 디자인개발, ③ 브랜드개발/관리, ④ 홍보동영상, ⑤ 통번역, ⑥ 역량강화교육, ⑦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⑧ 해외규격인증, ⑨ 특허/지재산권, ⑩ 홍보/광고, ⑪ 국제운송, ⑫ 서류대행/현지등록, 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⑭ 무역보험·보증) 및 통상애로 긴급지원 서비스 포함 총 15개 유형

18) ① 美관세산정, ② 美관세환급, ③ 美수출 원산지대응, ④ 생산거점 이전, ⑤ 유럽 통상 애로, ⑥ 인도 통상 애로, ⑦ 중동 물류 대응

19) 6대 서비스 유형(⑦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⑧ 해외규격인증, ⑨ 특허/지재산권, ⑩ 홍보/광고, ⑪ 국제운송, 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및 통상애로 긴급지원 서비스 포함 총 7개 유형

20) ① '25년도 對중동 수출 100만 불 이상 또는 ② 중동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 중 對중동 수출 50만 불 이상 기업

※ 패스트트랙 탈락 기업은 일반트랙 신청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

으로 선정되어 바우처를 발급받았고, 그 외 심사 중인 신청기업 305개사는 4월 10일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2026년도 수출바우처 신청·선정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본예산	신청기업수	선정기업수	발급액
산업바우처	47,449	4,268	1,324	44,777
긴급지원바우처(1차)	30,443	1,741	472	27,288
긴급지원바우처(2차)	8,000	(349)	(44)	(2,438)

※ 2차 긴급지원바우처 실행 후 본예산 잔액은 40억원

주: 괄호안 숫자는 3월 24일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현재 모집 중인 2차 공고를 통해 약 180개 기업이 8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어 실제 수출차질이 발생하고 구체적인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바우처 미보유기업 중 중동지역 수출실적 및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는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이 큰 중소·중견기업(10만\$ 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을 255억원 증액편성하였음.

2026년도 긴급지원바우처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 추가경정예산안

○ 255억원 = 對중동 10만불이상 수출기업 중 바우처 미보유 5,663개사* × 10%
× 0.45억원(평균사용액)

* ('26.2.기준) 중동 10만불이상 수출기업 중 기존 바우처 미보유기업 5,843개, 긴급지원 바우처(2차) 약 180개사(※ 4.10. 선정예정) 지원시 잔여기업 5,663개사로 추정

※ '25년 중동 21개국 기준 수출통계 (단위 : 개사, 대기업 제외)

기준항목	기준내용	총 기업수	기존 바우처 발급	미보유 기업
'25년 중동 전체 직수출액 기준	100만불 이상(A)	1,514	164 (10.8%)	1,350
	10만불 ~ 100만불(B)	4,723	230 (4.9%)	4,493
	소계(A+B)	6,237	394 (6.3%)	5,843
	10만불 ~ 1만불	4,752	208 (4.4%)	4,544
	1만불 미만	3,795	223 (5.9%)	3,572
합 계		14,784	825 (5.6%)	13,959

자료: 산업통상부

현재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2차 모집만으로 중동지역 직수출 기업의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고, 향후 고유가 및 화물운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²¹⁾²²⁾을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피해기

21) 참고로 최근 6개월간 주요 화물운임지수 추이는 다음과 같음

구분	SCFI ¹⁾	BDI ²⁾	BDTI ³⁾
2025. 8.	1,445.06	2,025	1,045
2025. 9.	1,114.52	2,259	1,128
2025.10.	1,550.7	1,966	1,436
2025.11.	1,403.13	2,560	1,452
2025.12.	1,656.32	1877	1,319
2026. 1.	1,316.75	2,148	1,702
2026. 2.	1,333.11	2,140	1,991

주1) 중국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컨테이너(완제품) 대상 화물운임 평가, 상하이 항운교역소가 집계하는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지수

주2) 발틱 건화물선지수(BDI) : 석탄, 곡물, 건축자재, 광석 등 건화물(원자재)에 대한 운임을 평가, 발틱해운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종합운송지수

주3) 발틱 원유유조선지수(BDTI) : 탱커(원유) 대상 화물운임 평가, 발틱해운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원유 유조선 지수

22) “호르무즈 이어 홍해도 위험하다”, 2026. 3. 28. 해사신문, 해운산업팀

- 실제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서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으며, 전쟁 이후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며 해운시장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을 추가적으로 모집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사업은 화물운임 상승 등에 따른 긴급한 수출 애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편성된 만큼, 지원기업을 조속하게 선정하고 기업의 자금부담을 적시에 완화함으로써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 외에도 2차 모집공고에서 지원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예산상 제약과 경쟁률로 인해 탈락한 기업이 추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조속한 선정·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부다비 칼리파항 인근에서 미사일 요격 과정 중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주요 항만 인프라까지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 항로 리스크를 넘어 항만 운영 및 보험, 선박 안전 관리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62>

③ 지사화 사업 확대에 따른 해외무역관별 여건·수요 점검 및 운영계획 마련 필요

내역사업인 ‘개별지원’ 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른바 ‘지사화’ 사업으로 불리고 있음. 동 사업은 지사 역할의 범위 및 지원단계에 따라 기업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KOSME) 및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²³⁾ 중 적합한 기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지 컨설팅 전문법인을 활용하고,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연계된 동포CEO 및 무역인을 통해 지원하는 반면,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에 전담직원을 파견하고 현지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방식으로 지사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해외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상황을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

23) ○ 단계별 지원내용 및 수행기관

단계	구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 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소비재 전용)	6개월	10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100~355만원	OKTA
			6개월	150~360만원	KOTRA
			9개월	225~375만원	중진공
			1년	250~600만원	KOTR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플랫폼 타겟지원,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9개월	600만원	중진공

그런데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 바이어와의 연락 차질, 계약 및 수출 지연·취소 등의 현지 대응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지 상황을 긴급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줄 지사 역할이 필요해지는 반면, 기존에 중동지사를 소규모로 운영하던 기업들도 직원을 철수·대피시키면서 현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코트라는 연중 상시적으로 지사화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나, 2025년 對중동 10만불 이상 수출기업이 6,237개사인 데 비해 중동지역 지사화 사업 지원기업이 311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동 지역 지사화사업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지역별 코트라 지사화사업 지원 및 인력 현황

(단위 : 개사, 백만원, 명)

구분	2025년 신청기업	2025년 선정기업	2025년 결산액	2026년 예산액	2026년	
					본사파견	현지직원
CIS	341	221	841	771	10	26
동남아대양주	1,154	681	3,426	3,139	15	73
북미	959	459	5,549	5,083	10	53
서남아	278	180	687	629	9	17
아프리카	170	120	528	484	8	12
유럽	869	545	4,806	4,403	24	60
일본	632	293	1,720	1,576	4	32
중국	726	473	2,055	1,883	21	49
중남미	491	348	1,880	1,723	11	39
중동	514	311	2,199	2,015	12	33
합계	6,134	3,631	23,690	21,706	124	394

주: (연간 예산) '25년 29,736백만원, '26년 26,762백만원이며, 차액은 OKTA 및 중진공 교부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산업통상부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사화사업을 75억원 증액편성하여 중동지역에서는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수출계약 변경·갱신 등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응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바이어 발굴, 홍보 및 수출성약 지원 등을 통해 중동지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들의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고자 함.

2026년도 지사화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 75억원 = 對중동 10만불 이상 수출기업 약 6,237개사 × 11% × 11백만원
 ※ 2026년도 지사화사업 지원예산 267억 6,200만원
 = (기업수) 4,384개사 × (평균 지원액) 6.1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따라 중동지역 수출기업의 긴급한 수출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코트라는 2026년 중동지역 무역관에 20억 1,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75억원이 추가확보되면 해당 지역의 예산 투입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임. 현재 무역관별 업무량, 현지 교육여건 및 채용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는 적정 인력을 단기간 내에 확보·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사화 사업 수요는 크지만 현지인력 채용 및 관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추경으로 중동지역 예산을 대폭 증액하더라도 코트라는 해외무역관별 현지인력의 확보 및 관리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지 사전점검하고, 실제 현지 대응역량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동지역 수출피해기업들의 대체시장 발굴 수요가 타 지역 지사화사업 신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출피해기업의 업종·품목·대체가능시장 등을 미리 파악하고 지역별·무역관별 신규인력 채용 필요성이나 예산배분계획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피해기업을 조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예산증액이 실제 현지 대응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별 운영여건과 사업수요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역별 인력·예산 배분 및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일반회계):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여건 점검 및 지원범위 보완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39-310)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조직 망운영비, 인건비,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3,414억 2,900만원 대비 59억 500만원(1.7%)이 증액된 3,473억 3,400만원으로 편성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29,290	334,606	341,429	347,334	5,905	1.7
사업비	83,434	88,750	75,715	81,620	5,905	7.2
해외공동물류센터	13,411	13,411	8,529	14,434	5,905	40.9

자료: 산업통상부

②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여건 점검 및 지원범위 보완 필요

내역사업인 ‘사업비’ 중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관, 입출고,

보관, 재고관리, 포장, 반품, A/S, 물류컨설팅 등을 일괄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에 대해 물류비의 50%,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비의 70%를 국고로 보조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함.

동 사업은 2020년 추경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물운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59억 4,300만원으로 증액²⁴⁾된 이후, 사업수요에 따라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였음. 그러나 최근 화물운임지수가 안정화 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26년 본예산에는 전년대비 지원목표 기업 수 및 예산액을 하향조정하였음.

연도별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현황 및 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국고예산(억원)(A)		130 ²⁵⁾	118.57	134.1	134.1	(본예산) 85.3 (추경) 144.3
예산산출근거	지원기업수(개사)	1,666	1,526	1,726	1,726	(본예산) 1,098 (추경) 1,476
	평균단가(만원)	780				
지원기업수 (개사)	합 계	1,719	1,555	1,730	1,727	-
	자부담	450	721	820	44	15*
	국고지원(B)	1,269	834	910	1,727	1,009
국고지원 기업당 지원액(만원)(A/B)		1,024	1,422	1,474	777	-
자부담률		(중소) 70%, (중견) 50%				
지원한도		2,000만원			1,200만원	

* 자부담기업은 상시모집중

자료: 산업통상부

24) 2018년·2019년·2020년 본예산으로 매년 9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200개 미만 기업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에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 규모가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음.

25) 예산안 산출시 1,282개사×7.8백만원=100억원이었으나, 예비비 30억원으로 기업 추가지원

그런데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해상물류 지연·선적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코트라는 「중동 상황 긴급대응 애로 상담 데스크」를 통해 기업 문의 및 애로사항에 대응하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대체로 수출입 물류 차질에 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²⁶⁾.

정부는 물류차질 대응지원을 위하여 앞서 검토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상·항공운송비 등을 직접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동 사업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59억 500만원(40.9%) 증액편성하여 피해기업이 중동지역 내 보관·배송 거점을 확보하거나 대체 거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026년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 59억 500만원 = 對중동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약 1,514개사 × 25% × 15.6백만원
 ※ 2026년도 해외공동물류센터 본예산 85억 2,900만원
 ≒ (기업수) 1,098개사 × (평균 지원액) 7.5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2026년 3월말 기준으로 코트라는 이와 관련하여 중동지역 내 14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8개 기업이 중동지역 내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에 따른 국고보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26년에는 7개 기업²⁷⁾이 중동지역 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음.

26) 중동상황 관련 기업 애로사항 유형별 분류

물류	금융	정보	기타	합계
74건 (28.9%)	30건 (11.7%)	83건 (32.4%)	69건 (27.0%)	256건 (100.0%)

주: 3.3.~3.20. 기간 동안 접수된 문의 및 애로사항

27) 2026년도 해외공동물류센터 국고보조사업은 2025년말에 모집 종료되어 1월 중 선정 완료됨.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실적

(단위: 개, 백만원)

지역	국가	센터 수	지원기업	'25년 결산액	'26년 본예산
CIS	7	16	19	149	95
동남아대양주	11	47	136	908	578
북미	2	52	929	7,802	4,962
서남아	4	15	8	44	28
아프리카	8	11	3	24	15
유럽	22	53	159	1,209	769
일본	1	21	239	1,980	1,259
중국	2	59	195	1,194	759
중남미	11	12	11	62	39
중동	12	16	28	39	25
합계	80	302	1,727	13,411	8,529

자료: 산업통상부

2026년 3월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모집종료되었으나, 기업 자체부담으로 물류 관련 풀필먼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고미지원 사업은 모집공고 중²⁸⁾임.

그러나 상담데스크에 물류비 급등에 따른 지원문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수출바우처 사업과 함께 동 사업도 추경으로 증액편성하고 약 380개 기업을 추가지원함으로써 중동지역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다만, 2025년말과 달리 2026년 3월말 현재 모집공고에 따르면 이스

○ 모집기간 : '25. 12. 8.(월) ~ '25. 12. 23.(화)

* 선정결과 발표 : '26. 1월 중 개별 통보(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8) ○ 신청기간: '26. 3. 4.(수) ~ 접수 마감 시까지

○ 지원기간: 협약시작일 ~ '26. 10. 31.(토)까지 ※ 협약시작일: 협약서 작성일 기준 익월 1일

○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라엘 내 공동물류센터²⁹⁾는 현지 사정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이와 같은 기존 센터의 추가적인 운영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센터의 운영여건을 재점검하고, 중동지역 내 대체 센터 연계 또는 추가 센터 확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중동지역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수요는 수출물류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자재 등의 수입물류에서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기업의 판로지원 뿐만 아니라 원자재·중간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므로, 수입기업도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고미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³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추경사업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존 해외물류센터의 운영여건과 대체 가능 거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체·추가 센터를 확보하는 한편, 공급망 불안에 따른 물류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미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수출기업 외 수입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29) 중동지역 내 무역관은 16개이나, 이란의 테헤란 무역관 등 4개 무역관은 기업수요 및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12개 국가에서 16개 센터를 운영으나, **2026년 3월말 현재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내 1개, UAE 1개 센터는 일시적으로 운영중단됨.**

30) 현재 지원대상: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 포함)인 중소·중견기업

4.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일반회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재추계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3574 - 306)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 공급망 컨설팅, 품목 분석을 통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1,350억 3,600만원이고 추경예산안은 4,746억 3,600만원이 증액된 6,096억 7,200만원임.

산업통상부는 동 세부사업 중 나프타 수입가격 상승분 보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나프타수급안정지원’ 내역사업에 대해 4,694억 5,2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지정국가 외에서 요소수입시 차액분 보전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수입선다변화지원’ 내역사업에 대해 39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	4,547	90,545	135,036	609,672	474,636	351.5
-나프타수급 안정지원	-	-	-	469,452	469,452	순증
-수입선다변화 지원	3,811	5,251	5,184	9,127	3,943	76.1

자료: 산업통상부

②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재추계 필요

‘나프타수급안정지원’ 내역사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사용되는 PGMEA³¹⁾, 에틸렌, SBR³²⁾ 등의 주원료가 되는 나프타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동사태 발발 전후의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NC C³³⁾ 설비는 공정 성격상 가동률이 6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전체 공정이 중단되는 성격이 있는 점,

31) 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

32) 스티렌-부타디엔-고무(Styrene Butadiene Rubber)

33) 나프타 크래킹 센터(Naphtha Cracking Center)

PGMEA, 에틸렌, SBR 등 나프타 공정 생산물은 반도체 포토레지스터, 이차전지 분리막, 선박 용접용 가스 제조의 주원료로서, 나프타 공급에 지연 또는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전방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수급에 영향을 미쳐 반도체, 이차전지, 선박 등 국가기간산업 생태계에 연쇄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나프타 공급을 안정시킬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

전방수요산업에서 사용되는 나프타 기반 석유화학제품

나프타 공정 생산물	수요산업	소재활용	나프타 공정 생산물	수요산업	소재활용
PGMEA	반도체산업	포토레지스터	HDPE·PP	이차전지산업	전지분리막
에틸렌	선박산업	용접용 가스	고순도 에틸렌	의료산업	멸균가스
SBR	자동차산업	타이어	HDPE 파이프	가스·수도·통신	도관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울산,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산업소재지의 지역경제와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서³⁴⁾,

글로벌 공급과다로 인해 위축된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현 사정을 고려할 때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을 보전할 국가경제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4) 지역 제조업 중 석유화학산업 비중: 울산 22.1%, 여수 58.1%, 서산 33.5% ('22.12. 기준)
지역 석유화학산업 고용인원수: 울산 14,611명, 여수 10,053명, 서산 3,380명 ('25.4. 기준)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산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① 중동사태 발발 전 5년간('21.3.~'26.2.) 월별 나프타 수입단가 중 상위·하위 각 10%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 중 최고액(톤당 783 달러)과 ② 중동사태 발발 후 기간('26.2.27.~3.13.) 중 일별 나프타 수입단가 중 상위·하위 각 10%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 중 최고액(톤당 1,087달러)의 차액(톤당 304 달러)을 기준으로 하여 차액을 추계하고 있음.

나프타수급안정지원사업 물량-단가 산출근거

대체수입 물량: 213만 톤

- 국내 석유화학기업이 체결·확보 추진 중인 대체수입 물량 기준

지원 단가: 톤당 304 달러

- ② 중동사태 후 수입단가 기준(톤당 1,087 달러) - ① 중동사태 전 수입단가 기준(톤당 783 달러)

213만 톤 x 304 달러/톤 x 1,450 원/달러 x 50% = 469,452백만원

- 환율 1,450원/달러 및 보조율 50% 적용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전쟁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됨에 따라 나프타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3월 27일 기준 나프타 수입단가는 톤당 1,293 달러를 기록하여 단가 차액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상정한 단가차액 톤당 304 달러³⁵⁾ 대비 67.8% 증가한 톤당 510 달러³⁶⁾에 달하였음.

35) 전쟁 후 수입단가 기준(톤당 1,087 달러) - 전쟁 전 수입단가 기준(톤당 783달러) = 톤당 304 달러

36) 3월 27일 수입단가(톤당 1,293 달러) - 전쟁 전 수입단가 기준(톤당 783달러) = 톤당 510 달러

나프타 일별 수입단가 ('26.2.27.~3.27.)

날짜	2.27.	3.2.	3.3.	3.4.	3.5.	3.6.	3.9.
톤당 가격 (\$/ton)	652	741	772	817	824	836	1,072
개선 대비 등락	-	89 (+13.6%)	120 (+18.4%)	165 (+25.2%)	172 (+26.4%)	184 (+28.3%)	420 (+64.3%)
날짜	3.10.	3.11.	3.12.**	3.13.	3.16.	3.17.	3.18.
톤당 가격 (\$/ton)	932	975	1,087	1,175	11,68	1,147	1,159
개선 대비 등락	280 (+42.9%)	323 (+49.6%)	435 (+66.8%)	523 (+80.2%)	516 (+79.1%)	495 (+75.9%)	507 (+77.8%)
날짜	3.19.	3.20.	3.23.	3.24.	3.25.	3.26.	3.27.
톤당 가격 (\$/ton)	1,291	1,276	1,325	1,224	1,128	1,242	1,293
개선 대비 등락	639 (+97.9%)	624 (+95.6%)	673 (+103.1%)	572 (+87.7%)	476 (+73.0%)	590 (+90.5%)	641 (+98.3%)

* 푸른음영: 전쟁 후 수입단가 추계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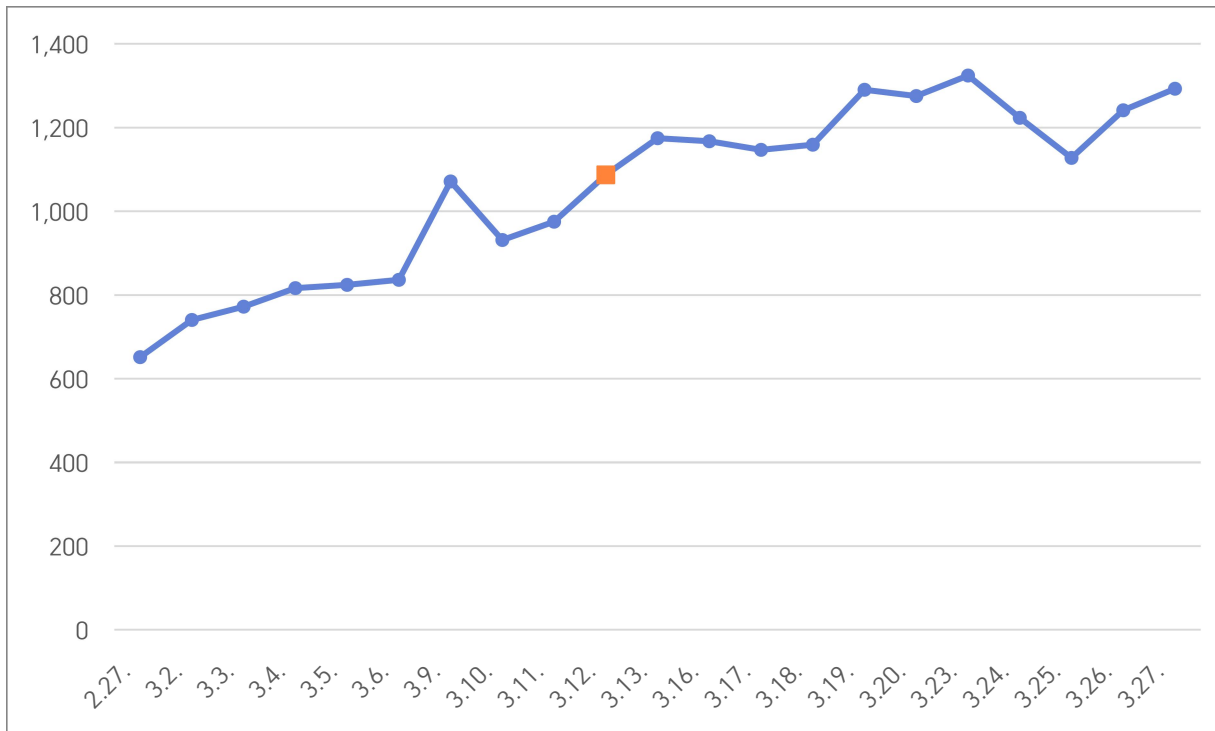
** 3.12. 톤당 1,087 달러 기준 전쟁 후 수입단가 산정

자료: 산업통상부

나프타 수입단가가 전쟁 후 수입단가 추계구간인 2월 27일부터 3월 13일이 도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동 사업의 대체수입물량은 가격상승에 따라 조정된 수요를 전제로 추산한 물량(213만 톤)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종전 수입물량(225만 톤)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나프타 수입단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수입물량 회복에 따라 지원금액 총액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심사일 기준 1주일간의 평균 수입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단가 상승분을 재추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프타 일별 수입단가 ('26.2.27.~3.27.)



* 3.12. 톤당 1,087 달러 기준 상승단가 산정

자료: 산업통상부

5.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일반회계): 추정 편성 요건을 고려한 사업집행 관리 철저 필요 등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3541 - 450)은 제조업 명장의 경험·판단·직관 등이 녹아든 제조암묵지를 AI 기업이 디지털화하고 암묵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실제 제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³⁷⁾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8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제조암묵지기반 AI모델개발(R&D)	-	-	-	80,000	80,000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제조암묵지를 AI가 학습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정제하고 AI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산업통상부는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기술고도화 및 확산사업³⁸⁾ 추진을 계획 중에 있음.

37) 이미지·영상·온도 등 **제조환경 판별 AI** 및 LLM 기반의 **논리적 판단 AI**

38) '26년에 구축한 DB 및 제조 AI 모델을 활용하여 1,000개소 이상의 제조 현장에 **맞춤형 제조 AI 솔루션**(제조 AI 모델, AI 로봇, 숙련공 양성프로그램 등) **개발 및 보급**

② 추경 편성 요건을 고려한 사업집행 관리 철저 필요

산업통상부는 M.AX 얼라이언스³⁹⁾ 출범('25.9) 이후 제조기업들의 AX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베이비붐 세대 숙련공의 은퇴가 가속화되어⁴⁰⁾ 제조 명장의 기술·노하우 등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제조기업들이 해외 AI 기업 개발·활용에 의존하기 전 국내 AI 기업과의 연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추경 예산 반영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0건의 신규 과제별로 제조기업, AI 기업,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21억 3,300만원 중 2026년도 9개월분에 해당하는 16억원을 반영하여 총 800억원을 신규 편성함.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
제조암묵지 기반AI모델 개발(R&D)	80,000	○ 연구개발출연금(360-05) : 80,000백만원 - (신규) 50건 × 2,133.3백만원 × 9/12개월 = 80,0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39) 제조 AX(AI Transformation; AX)를 위해 1,000여개 이상 제조기업·AI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

40) 제조업 노동자 평균연령의 경우, 미국은 '11년 44.1(세)에서 '26년 44.6(세)로 경미하게 증가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39.2(세)에서 44.9(세)로 급격히 증가함.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R&D) 과제당 단가 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세사업명	세부내역(예시)	금액(비율)
데이터 디지털화	-비정형 제조 데이터(영상, 음성 등) 수집 인력 인건비 -데이터 정제·라벨링 용역 비용	480(30)
AI 개발·검증	-모델 학습·추론 인프라 사용료(클라우드 GPU 등) -현장 테스트·파일럿 적용(파일럿 라인 세팅 등) 비용	480(30)
장비 구축	-비정형 데이터 수집용 장비(고해상도 카메라, 진동·온도 센서 등) 구매비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서버, NAS 등) 도입비 일부 지원비용	160(10)
컨설팅	-대학·연구소 전문가 매칭·자문료(암묵지 구조화 방법론 자문 등) -AI 활용 검증 단계별 컨설팅 비용	160(10)
인건비 등 인센티브	-참여 제조 명장·숙련공 참여수당·인건비 지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모델 정확도, 불량률 개선, 생산성 향상 KPI 달성 시) 지급 재원	320(20)
합계		1,600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과 유사하게 현장 제조데이터를 통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과제의 단가⁴¹⁾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암묵지 관련 수요조사⁴²⁾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의 과제당 단가 및 과제 수는 적정 수준으로 보여짐.

41)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3231-304)사업의 ‘강관 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기반 설비 자율제어 기술 개발’ 과제의 '26년 정부출연금은 15억원으로 확정됨.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R&D)사업은 비정형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실제 구현 여부를 확인하는 등 타 R&D 사업 대비 데이터 확보 및 AI 개발 검증 비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42) 암묵지 관련 수요조사: ('25.9) 66건(정기 통합 수요조사) → ('26.2) 102건(개별 주제 수요조사)으로 증가

다만, 산업통상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6년 4월 중순 신규 사업공고 이후 5월까지 컨소시엄 선정을 완료하고, 2026년 6월부터 착수하여 1·2차 중간점검, 최종평가 및 성과보고 순으로 2027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R&D) 부처 내 사업계획(안)

단계	일정(안)	비고
착수·세부 설계	'26.6 (1개월)	수정계획서 제출, 키오프 회의 등
수행·중간점검 1차	'26.7~'26.10 (4개월)	7~9월 : 데이터 구축 집중 10월 : 중간점검·내부 리뷰
수행·중간점검 2차	'26.11~'27.2 (4개월)	11~1월 : 파일럿/고도화 2월 : 명장-AI 기술 검증계획 수립
최종평가·성과보고	'27.3 (1개월)	데이터·모델 개발 및 실증 최종평가

자료: 산업통상부

동 계획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과제 추진이 진행되더라도 과제수행에 따른 AI 모델 개발·검증 및 현장 실증은 다음연도인 2027년 2월에 서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공고 지연에 따른 사업 시행의 추가적인 지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⁴³⁾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집행을 2026년 내에 완료하고 2027년부터 본예산을 통하여 기술고도화 및 확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제 선정기준 보완 필요

동 사업은 제조 명장의 기술·노하우로 축적된 제조암묵지가 숙련인력 고령화와 은퇴로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데이터와 AI 모델로 전환하여 디지털자산화 함으로써 제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전승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동 사업의 신규 과제 50건은 자유공모 방식으로 공모 후 제조기업 수요, 산업 파급력,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과제 선정기준에는 기술성(40), 연구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40)이 포함되어 있음.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R&D) 과제 선정기준(안)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40)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정부지원 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 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 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 사업화 실적(15):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정성 ▪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 경제성(10):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 지역적 파급효과(5):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투자 계획 및 매출 증대 효과 등)

자료: 산업통상부

위와 같은 기준은 일반적인 R&D 과제의 기술개발 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타당하나, 제조암묵지의 활용·전승이라는 동 사업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동 사업은 단순 제조 AI 모델 개발지원 사업이라기보다 숙련공 은퇴 등으로 소실될 우려가 있는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시급히 디지털화한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과제선정 시에도 단순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외에 숙련기술 단절 우려가 큰 공정·업종에 해당하여 암묵지의 조속한 보존 필요성이 요구되는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제조 명장 은퇴, 암묵지 소실 위험 등으로 인해 디지털화의 시급성이 큰 분야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현행 과제 선정기준에 사업의 시급성과 관련된 정성적 요소를 보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일반회계): 유사 사업 간 과제의 차별화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3672 - 301)은 로봇을 활용한 고강도·고위험 제조 작업 대체, 로봇 관련 규제 해결, 해외 판로 개척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능형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67억 3,800만원이며 추경예산안은 200억원이 증액된 767억 3,800만원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57,446	57,446	56,738	76,738	20,000	35.2
제조로봇 실증	20,357	20,357	19,357	19,357	-	-
서비스로봇 실증	10,214	10,214	8,714	8,714	-	-
규제혁신 로봇 실증	7,201	7,201	7,201	7,201	-	-
대규모융합 로봇 실증	6,300	6,300	6,300	6,300	-	-
기업성장성 강화	9,788	9,788	9,788	9,788	-	-
산업생태계 조성	3,586	3,586	5,378	5,378	-	-
AI로봇 및 부품 실증	-	-	-	20,000	20,000	순증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 중 추정 예산으로 증액된 내역사업은 신규사업으로, AI팩토리 및 휴머노이드와 휴머노이드용 부품을 실증하는 ‘AI로봇 및 부품 실증’(200억) 사업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내역사업별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사업명	2026년		사업내용
		본예산	제1회 추경안	
AI로봇 및 부품 실증	AI팩토리 실증	-	10,000	제조·서비스 산업 분야에 AI 기반 로봇 적용·실증
	휴머노이드 실증	-	5,000	제조사와 수요처가 휴머노이드를 공동 실증하여 적합성 검증
	휴머노이드용 부품 실증	-	5,000	개발 부품의 성능 검증 및 부품 단독 실증 지원

자료: 산업통상부

② 유사 사업 간 과제의 차별화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산업통상부는 로봇 핵심부품의 외산 의존도가 높아 부품 공급망 종속이 우려되고⁴⁴⁾, 최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⁴⁵⁾ AI와 로봇의 융합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시 예측과 달리 시급히 많은 과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추경 예산 반영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44)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 ('16) 41.1% → ('18) 43.2% → ('21) 44.4% → ('23) 44.9%

45) * 현대자동차: '28년부터 아틀라스(휴머노이드) 연 3만대 양산 계획, 새만금에 로봇 생산시설 구축 예정
* 테슬라: 美 프리몬트 공장에서 전기차 모델 S·X를 감산하고 옵티머스(휴머노이드) 생산 확대

이와 관련하여 추경예산안의 세부사업 내역별로 살펴보면, ‘AI 팩토리 실증’ 사업은 신규 과제 20건, ‘휴머노이드 실증’ 사업은 신규 기업 10개사, ‘휴머노이드용 부품 실증’ 사업은 신규 과제 10건별로 정부출연금 5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총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음.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
AI 팩토리 실증	10,000	○ 사업출연금(350-02) : 10,000백만원 - (신규) 과제 20건 x 500백만원 = 10,000백만원
휴머노이드 실증	5,000	○ 사업출연금(350-02) : 5,000백만원 - (신규) 10개사 x 500백만원 = 5,000백만원
휴머노이드용 부품 실증	5,000	○ 사업출연금(350-02) : 5,000백만원 - (신규) 과제 10건 x 500백만원 = 5,0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동 사업의 세부사업 중 ‘휴머노이드 실증’ 및 ‘휴머노이드용 부품 실증’의 경우 로봇산업의 AX 촉진을 위한 완전 자율 휴머노이드 로봇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⁴⁶⁾’과 지원내용 등에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 중 내역사업의 하나인 ‘휴머노이드 제품개발’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작업현장에 적합한 물류

46) 2026년 신규사업(코드: 3541-302)

창고용, 방제 농업용, 재난구조용, 범용 생산공정용 로봇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발 과정에서 휴머노이드와 휴머노이드용 부품에 대한 성능 검증 및 현장 적용 등 실증이 일정 부분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경안에 편성된 ‘AI로봇 및 부품 실증’과 지원내용이 일부 유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향후 과제선정 단계에서 기존 유사 사업 여부 및 과제 내용의 차별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규제혁신 로봇 실증’ 사업의 일부 과제에서 중간점검을 통과한 실증로봇 중 상당수가 실제로 주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⁴⁷⁾,

미래첨단산업인 로봇산업의 육성 및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 산업통상부 및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중간점검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 내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7) ‘이언주 “로봇진흥원, 강퍽 로봇에 국비 6.8억원...직무유기”’, 2025. 10. 16. 중부일보
자료: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06032>

7. 산업단지환경조성(지특회계): 추경 편성 요건을 고려한 사업추진 철저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은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노후산단 등을 청년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4,099억 2,000만원 대비 140억원(3.4%) 증액된 4,239억 2,000만원이 편성됨.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추경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B-A)	%
산업단지환경조성	331,378	387,478	409,920	423,920	14,000	3.4

자료: 산업통상부

② 추경 편성 요건을 고려한 사업추진 철저 필요

동 사업의 추경 증액분은 내역사업인 ‘엣지 AIDC⁴⁸⁾ 실증 시범사업’ (신규, 140억원) 편성에 따른 것임.

동 내역사업은 1MW급 이하 규모 초고효율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조성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AI 솔루션 기업을 위한 실증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시범 산업단지 1개소에 대한 1년차 구축비 중 국비 지원액 140억원이 신규 편성됨.

엣지 AIDC 실증 시범사업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항목)	세부내역(안)	예산
인프라(시설) 구축	PMDC 240KW 공랭식(18억원) X 2개	36.0
H/W 장비	NVIDIA HGX B300 서버(18억원) X 4개	72.0
	NPU 서버(2.8억원) X 20개	56.0
	스토리지·네트워크	10.0
SW 및 플랫폼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등	8.0
합계		182
국비		140
지방비 및 자부담		42

주: 이동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는 컨테이너 내부에 서버랙과 냉각장치를 설치하고, GPU와 NPU를 탑재한 일체형 구조의 센터를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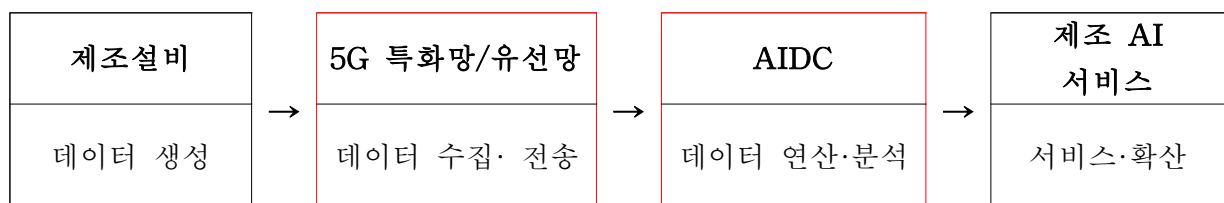
48) AIDC는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학습에 특화된 고성능 데이터센터(Data Center)로, ‘엣지 AIDC’는 사용자나 데이터 발생 지점 근처에 분산 배치된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의미함.

추경 편성 필요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초기 인프라 투자비, AI 전문 인력 부족,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등으로 산업단지 중소 제조 기업의 자체 AI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이를 공동 활용하는 형태의 산단 공유형 AI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함.

기존의 민간주도 AIDC는 통상 40MW급 이상 대형으로 추진됨에 따라 구축기간에 3~4년이 소요되고, 센터 유치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 등 주민수용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는 컨테이너 내부에 서버랙과 냉각장치(공랭식)를 설치하고, GPU와 NPU를 탑재한 일체형 구조로서 6개월 이내에 구축이 가능한 1MW급 이하 규모의 ‘이동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를 산업단지에 설치하여 입주기업의 AI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고,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임.

산업단지 AX 혁신 인프라 구성(안)



자료: 산업통상부

특히, 2026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되어 기추진 중인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구축’(2026년도 본예산 20억원) 사업과 동 내역사업을 연계하여 구축함으로써 공장 현장의 대용량 데이터를 5G 특화망을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제어 서비스를 엣지 AIDC를 통해 지원하는 실증환경을 단기간 내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동 내역사업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한 산업단지 내 엣지 컴퓨팅 환경 조성으로 공장 제조 데이터에 특화된 AI 연산 자원 및 고속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수도권 집중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한 표준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전국 주요 산단 확산을 위한 실증 사례를 발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정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해당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추경 편성 이후 5월 사업공고 및 7월 과제협약 체결을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3개월간 실제 엣지 AIDC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여 11월까지 구축을 완료, 12월 실증 성과를 점검하고 최종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임.

옛지 AIDC 실증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5월	시범산단(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및 접수
7월	시범산단 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8월~10월	산단 옛지 AIDC 인프라(HW,SW) 발주 및 구축 착수
10~11월	AIDC 구축 완료 및 산단 제조특화 AI 서비스 실증 운영
12월	실증 성과 점검 및 총사업비 최종 정산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옛지 AIDC 실증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현재 지정된 총 24개의 스마트그린산단 중 한 곳이 될 것이며, 이 중 2025년 10월에 선정된 AX 실증산단 10개소⁴⁹⁾의 경우,

2026년 2월 M.AX 얼라이언스⁵⁰⁾ 내 ‘산업단지 AX’ 분과를 신설하여 지방정부·전문기관·입주기업 간 거버넌스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추정 예산 교부 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실증 착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설명임.

다만, 실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 내역사업 유치에 위한 핵심 후보군 소재 지자체의 이해관계 및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이를 사업공고 및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49) 창원, 반월시화, 명지녹산, 울산미포, 천안, 군산, 광주첨단, 여수, 대불, 강원후평

50) 2025년 9월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장관, 대한상의회장, 1,300개 이상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는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 출범을 공식화하였음.

특히, 동 추경 내역사업의 목적은 AI 인프라 구축 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시급히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기존의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지원 체계 하에서 AX 실증산단으로 이미 선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10개소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산단 간의 이해관계 조율 필요성도 추가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나아가, 산업통상부가 동 내역사업과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구축’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26년 3월 말까지 산업통상부는 사업 기획 및 공고를 준비 중인 상황으로 실질적인 사업 착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⁵¹⁾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추경에 신규 편성된 ‘옛지 AIDC 실증 시범사업’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진도에 맞추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공고 및 대상지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기편성 사업인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 사업과 함께 연계 추진 시 두 내역사업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1)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옛지 AIDC 실증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구축’ 사업 또한 7월 시범산단 평가 및 선정, 과제협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③ 중장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지침의 제·개정 필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옛지 AIDC 실증 시범사업’은 AI 서비스 지원제 공을 통해 제조 혁신이 필요하나 수도권 집중형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으로 인하여 인프라가 열악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이동형 모듈러 방식 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일차적인 사업추진 목표로 삼고 있음.

다만, 이와 같은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AI 서비스 및 제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이후 수행기관의 책임성 있는 인프라 운영 및 수익 공유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옛지 AIDC 실증 시범사업’은 ‘스마트그린 산단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공고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그런데,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현행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세부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사업을 제외한 나머 지 모든 유형의 사업이 사업종료 이후 성과물을 수행기관(주관기관 또 는 참여기관을 의미함⁵²⁾)의 소유로 하고 있고, 성과활용기간 또한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52)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거나 사업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추진·관리하는 단체, 학교, 기관 또는 기업을 의미하고,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학교, 기관 또는 기업을 뜻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세부유형별 소유권 및 성과활용기간에 관한 사항

구분	사업종료 이후 소유권	성과활용기간
공정혁신시물레이션 센터	수행기관의 소유	5년 이내
스마트물류플랫폼	수행기관의 소유 ※ 단, 공동물류센터 내 설치한 물류첨단화 설비의 소유권은 공단 소유로 함	5년 이내
통합관제센터	지자체의 소유로 할 수 있음	5년 이내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수행기관의 소유	5년 이내
지역특성화제조기반구축	수행기관의 소유	5년 이내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수행기관의 소유	5년 이내 ※ 수집된 데이터는 지정된 프로토콜 방식으로 10년간 의무제공
에너지자급자족형인프라	자율적 합의로 정함	별도 명시 ×
디지털기반자원순환시범 산단	수행기관의 소유	5년 이내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수행기관의 소유	5년 이내

자료: 산업통상부

‘성과활용기간’은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수행결과의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지침은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사업종료시까지 발생하는 당해연도 수익금을 차년도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사업종료 연차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유지·운영비용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옛지 AIDC 실증 시범사업’은 기존의 ‘AX 실증산단 구축사업’과 달리, 컨테이너 내부에 서버랙과 냉각장치(공랭식)를 설치하고,

GPU와 NPU를 탑재한 일체형 모듈 형태의 데이터센터를 산업단지 내에 구축하는 것으로 신속한 구축이 가능한 만큼 인프라의 이동편의성이 높고 재배치 비용이 낮다는 점을 특징으로 함.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단지 내 지속적인 AI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해당 구축물이 수행기관(컨소시엄)의 소유로 전환된 채로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수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동 내역사업을 통해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바탕으로 구축한 이동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를 소재 산업단지가 아닌 수익성이 높은 다른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유인이 발생하게 됨.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당초 사업추진 목표와 달리 지역 산단과 수도권권의 AI 인프라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옛지 AIDC 실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종료 및 성과활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수행기관의 지속적인 AI 서비스 제공 및 적정 사용료 책정 등 공공성 및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신규 추진 내역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관리지침의 제·개정을 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8. 지역산업위기대응(지특회계):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강화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지역산업위기대응’(3362-343)은 산업위기지역의 위기 산업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차보전지원과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246억 6,700만원 대비 70억원(28.3%) 증액된 316억 6,700만원이 편성됨.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B-A)	%
지역산업위기대응	-	5,165	24,667	31,667	7,000	28.3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	1,340	15,145	15,145	-	-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	-	3,825	9,000	16,000	7,000	77.8
사업관리비	-	-	522	522	-	-

주: 2025년 추경 편성 당시 각 내내역사업에 반영되어 있던 기관운영출연금을 2026년도 본예산부터 ‘사업관리비’ 내역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음.

자료: 산업통상부

②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중 현행법 제8조⁵³⁾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역산업 악화 및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지원 제도로써,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지원,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음.

53)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규모 재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④ < 생략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4개의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이 지정되어 고시되어 있는 상황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

구분	지역	지정기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남 여수	‘25.5.1.~’27.4.30.
	충남 서산	‘25.8.28.~’27.8.27.
	경북 포항	‘25.8.28.~’27.8.27.
	전남 광양	‘25.11.20.~’27.11.19.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추정 증액분은 내역사업인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예산 90억원 대비 70억원(77.8%)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동 내역사업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주된 산업의 위기 및 지역 경제 악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된 산업 관련(전·후방 포함) 기업 및 재직자·구직자를 대상으로 ① 위기지역 소재 기업 수요 기반의 수요 특화 맞춤형 기업지원(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과 ②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2025년 제2회 추경부터 신규로 편성·추진되어 왔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하여 전남 여수, 충남 서산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주요 기업의 공장의 가동률이 저하 또는 중단된 상태이고, 이와

관련한 전후방 기업들 또한 주요 대기업의 투자감소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원료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였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요기업 및 전후방기업 동향(2026.3월말 기준)

주요기업 동향
• (GS칼텍스) 납사 공급을 위해 대정비 연기(3월→5월) • (LG화학) 여수 2공장(80만톤) 가동 중단 발표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정기보수 조기 추진 • (여천NCC) 공급 불가항력 선언
전후방기업 동향
• 대기업(고객사)의 투자 감소 및 지연으로 인한 경영악화 우려, 발주 예상 용역 업무 감소로 수주 기회 상실 • 작업 지연으로 인해 공정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추가 공사 수주가 어려워 일시적인 공백 발생 • 직접적인 수주 감소와 더불어 인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더해 일부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서산 등)의 경우 당초 지원 계획 대비 신청 건수의 초과 접수로 인하여 일부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 소프트웨어 교육, 산업전환 교육 등 현장 수요가 높은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였음.

동 내역사업 추경 편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기존 위기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납사 공급 차질,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한 산업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기업지원, 전문 인력양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 내용 예시

지원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기업 지원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 (양산 전 모델)	제품설계, 시험, 제작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지원
		공정개선	장비·공정 효율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성·품질·안전 확보
		기술지도	첨단분야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문 및 애로기술 해결 지원
		IP 및 R&D 전략	특허전략 수립 및 IP기반 기술개발 전략 수립 지원
		특허 획득	보유기술의 지식재산권 획득, 특허명세서 작성 지원
	사업화 지원	샘플제작 (홍보성)	수요기업용 완성품 홍보 샘플 제작 지원 등
		마케팅	홍보물 제작지원(팜플렛, 홍보영상 등)
		위기극복 BM 수립	중장기 사업화 컨설팅(기업의 내부 역량 및 제품 관련 산업 분석)
인력 양성 지원	산업 맞춤형	기업방문 맞춤형 인력양성	공정안전보고서(PMS) 작성 및 평가 교육 등
		산업현장기반 기술교육	공정 시뮬레이션 교육(SAF 제조 및 탄소저감, ASPEN), 통합환경허가 운영실무 등
		산업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현장에 필요한 안전 수칙과 대응방법 교육
		마케팅 및 품질관리	ESG 탄소 경영교육, 품질관리(QC/QA) 교육 등
		R&D 전략교육	연구개발, 특허 창출 전략 등 연구소 인력 교육
	실습형	직무 전문 교육	SW, IT 기술교육,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직업 전환 교육	3D 및 CATIA 통합 실무 등
	자유 제안	기업요청 교육프로그램	기업이 희망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동 내역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산업의 회복 및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세부 지원 유형별로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측정 및 평가 결과를 다시 세부 지원 유형별 예산 배분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반영하는 성과관리체계가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런데, 2025년도 제2회 추경부터 신규로 추진된 동 내역사업의 2025년 및 2026년 성과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수혜기업 지원 건수’, ‘인력양성 교육 수료율’, ‘기업 만족도’ 지표 모두 2025년 기준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초과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목표치는 세 지표 모두 2025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 내역사업 관련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구분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수혜기업 지원 건수 (단위 : 건)	목표	60	90	자금수요를 고려한 지원 건수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동 사업의 지원건수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167	-			
인력양성 교육 수료율 (단위 : %)	목표	85	85	자금수요를 고려한 지원 건수	교육 수료자 수 /교육 신청자 수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99	-			
기업 만족도 (단위 : %)	목표	60 이상	70 이상	전년 대비 지원 전문성 제고에 따른 성과목표 확대	수혜 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91.2	-			

자료: 산업통상부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지원 분야의 성과지표인 ‘인력양성 교육 수료율’의 산출 근거를 보면, 교육 수료자 수를 신청자 수로 나눈 값으로 성과를 산출하고 있어 인력양성 지원에 따라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산출 중심의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로,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2025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여수 지역의 경우 인력양성 지원 유형 중 하나로 ‘산업맞춤형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총 23회에 걸쳐 73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그런데, 이 중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실시 건수가 총 8회, 교육 인원 수는 259명을 차지하고 있음.

인력양성 지원 내 산업맞춤형 프로그램의 교육 현황(여수)

구분	교육명	회사명	교육 인원	수료 인원	교육 차수
1	DCS skill-up 고급 과정	한화솔루션	12	12	3
2	현장 실무자 원가절감 마인드셋 교육	한화솔루션	40	40	4
3	계전심화과정 교육(1차)	한남테크노(주) 외 2개사	15	15	5
4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금호기술검사(주) 외 2개사	10	10	6
5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재원산업(주) 외 2개사	15	15	7
6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여천NCC	20	20	8
7	비R&D 교육	에스아이이앤씨(주)	4	4	9
8	계전심화과정 교육(2차)	(주)와이투엔지니어링 외 4개사	10	10	10
9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45	45	11
10	위기극복 및 원가절감 교육	비를라카본	94	94	13
11	신임 팀장 리더십 교육	폴리미래	15	15	15
12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재원산업(주) 외 8개사	18	14	16
13	EX CoPC 방폭 자격 과정	유한기술(주) 외 14사	30	30	17
14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여천NCC	121	121	18
15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에이치엔지케미칼	18	18	19
16	심사 관련 전문교육	비를라카본	12	12	20
17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휴켄스, TKG일렘, 동립기계	10	10	21
18	차과장 교육	폴리미래	14	14	23
19	위험성평가교육	에이치엔지케미칼	69	69	25
20	사고조사 및 분석 전문가 양성교육	여천NCC	71	71	26
21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에스알, 세한소방	47	47	27
22	안전 리더십 교육	피오씨	20	20	28
23	빅데이터 실무 교육	모듬이엔지	25	25	29
합계			735	731	-

자료: 산업통상부

이는 지역 경기 침체 및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기업의 부담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R&D 등 기술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 지원의 성과를 교육 신청 인원 대비 수료 인원 비율로만 측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질적인 차원의 성과가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 또한 존재함.

마지막으로, 산업통상부는 ①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기술지도, IP 및 R&D 전략, 특허 획득 등에 관한 기술지원과 ② 샘플제작, 마케팅, 위기극복 관련 사업모델 수립 등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동 내역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수혜기업 지원건수와 기업만족도 조사 결과만이 활용되고 있어 해당 지원이 실질적인 기업의 부가가치 및 매출액 창출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대한 성과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특히,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기업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여수, 포항, 서산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 및 홍보, 지원기관 대응, 업무처리 절차, 위기 극복 기여도, 사업 전반적 만족도 등 5개 영역에 대한 기업별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기업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여 수	포 항	서 산	평 균
사업 이해 및 홍보	91.0	90.4	87.0	89.5
지원 기반 대응	92.5	92.2	88.7	91.1
업무처리 절차	93.8	93.9	88.6	92.1
위기 극복 기여도	90.3	91.0	88	89.8
사업 전반적 만족도	94.7	95.7	89.5	93.3
평 균	92.5	92.6	88.4	91.2

자료: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기업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발췌

이에 따라 여수, 포항, 서산 지역의 종합적인 만족도 점수는 각각 92.5, 92.6, 88.4점이고, 영역별 점수의 만족도 최하점이 서산 지역의 위기 극복 기여도인 88.0점으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측정을 통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조사의 변별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이에 비해 유사 사업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수혜기업의 2년차 생존율, 수혜 창업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등 객관적인 지표⁵⁴⁾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에 따른 지원이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성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지원이 실제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및 부가가치·매출액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4)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중 일부 발췌>

성 과 지 표	측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수혜 창업기업 2년차 생존율 (단위 : %)	Σ (Y)년 창업지원 수혜기업 중 (Y+2)년 생존기업 수 / Σ (Y)년 창업지원 수혜기업 수) × 100	창업지원기업 이력성파조사
자금 공급 수혜 창업기업 매출액 증가율 (단위 : %)	$[(\Sigma \text{ 정책자금 수혜기업 지원년도 매출액} - \Sigma \text{ 동일기업 지원전년도 매출액}) / \Sigma \text{ 동일기업 지원전년도 매출액}] \times 100$	수혜기업 전수조사 (중진공DB)

9. 석유비축사업 출자(에특회계): 석유 비축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필요 등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석유비축사업 출자’(5432-301)는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석유비축사업의 효과적 수행으로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유 구입, 비축기지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553억원 대비 1,584억 3,300만원(286.5%) 증액된 2,137억 3,300만원이 편성됨.

석유비축사업 출자 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B-A)	%
석유비축사업 출자	79,901	79,901	55,300	213,733	158,433	286.5
비축유구입	49,281	49,281	26,300	181,733	155,433	591.0
비축기지유지보수	30,620	30,620	29,000	32,000	3,000	10.3

자료: 산업통상부

먼저, ‘비축유구입’ 내역사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연차별 비축유 확보를 통한 석유수급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원유 25만 5,000배럴을 포함하여 130만 배럴을 추가로 비축하기 위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263억원 대비 1,554억 3,300만원(591.0%) 증액된 1,817억 3,300만원이 편성됨.

다음으로, ‘비축기지 유지보수’ 사업은 석유비축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비축유를 안정적으로 확보·저장함으로써 석유수급 위기 시 비축유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9개 석유비축시설(1억 4,600만 배럴 규모) 외에 추가 비축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사전 용역비 30억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290억원 대비 30억원(10.3%) 증액된 320억원이 편성되었음.

석유비축사업 출자 사업 추경 증액 소요 세부 현황

'26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213,733백만원	○ 일반출자금(460-01) : 213,733백만원 가. 비축유 구입 - 원유 1,300천배럴 구입을 위한 181,733백만원 · 추가증액 소요: 원유 1,300천B×단가 \$96.41/B×환율 1,450원/\$ * (단가) 예상유가 \$88.85/B+운임 및 보험료 \$7.56/B 나. 비축기지 유지보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 교체비 32,000백만원 · 추가 증액 소요: 비축기지 부지선정 등 사전용역 : 3,0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② 석유 비축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필요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2025년 ‘석유비축사업 출자’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799억 100만원 대비 611억 3,300만원(76.5%)이 집행되어 한국석유공사에 출자금으로 교부되었고, 187억 6,8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비축유 구입’ 내역사업 예산 492억 8,100만원 중 185억 4,800만원과 ‘비축기지유지보수’ 내역사업 예산 306억 2,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되었음.

석유비축사업 출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본예산	추경(A)					
‘22	38,236	38,236	38,236	38,236	100.0	100.0	-
‘23	67,268	67,268	67,268	67,268	100.0	100.0	-
‘24	66,595	66,595	66,595	66,595	100.0	100.0	-
‘25	79,901	79,901	79,901	61,133	76.5	76.5	18,768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는 2025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에 따라 일부 예산이 2026년도 이월된 것으로, 기체결한 비축유 구입 계약 대금 493억원 중 이월액 185억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가 2026년 1월 6일 자체 재원으로 우선 부담하였고, 이후 2026년 예특회계 본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1월 29일 한국석유공사에 지급이 완료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에특회계의 주요 재원⁵⁵⁾인 산업통상부 소관 법정부담금(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광해방지부담금)은 정채 또는 감소하는 반면, 세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실제로, 2025년 산업통상부 소관 4개 법정부담금의 예산현액 1조 8,372억 8,200만원 대비 실제 수납금액은 1조 3,544억 600만원으로 수납률이 7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3년 연속 법정부담금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7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2025년 에특회계 세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현액	수납실적	예산현액	수납실적	예산현액	수납실적
세입	5,770,437	5,313,723	6,471,155	5,477,512	6,145,901	5,383,199
산업통상부 소관 법정 부담금	1,821,355	1,218,059	1,894,449	1,409,209	1,837,282	1,354,406
그 외 세입	3,949,082	4,095,664	4,576,706	4,068,303	4,308,619	4,028,793

자료: 산업통상부

뿐만 아니라,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통상

55)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목인 법정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하고 단일 세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부 소관의 자원수급 및 안보 관련 세출 사업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이 상대적으로 재원 투입 및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될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임.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비축유 구입’ 사업의 추경 증액분 1,554억 3,300만원 조달을 위하여 에특회계 내 자금이 원활히 배정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산업통상부 소관 법정부담금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특회계를 통한 비축유 구입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을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비축기지 사전용역비 편성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마련 필요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석유 비축물량은 1억 60만 배럴로, 한국석유공사 9개 석유비축기지에 원유 및 석유제품의 형태로 비축되어 있음.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수립한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상 2025년까지의 비축 목표인 1억 10만 배럴을 준수한 목표 달성치로 평가됨.⁵⁶⁾

56) 산업통상부는 2025년 12월 말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비축유를 102.6백만 배럴까지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통해 산업통상부는 ‘비축기지유지보수’ 내 역사사업에 비축시설 증설을 위하여 비축기지 부지선정 등을 위한 사전 용역비 30억원을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출자금 소요액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총사업비 심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 또한 검토 중인 상황에서 2013년 「석유공사 울산비축기지 지하화사업」 당시 최소 계획 사업비 4,590억원 대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11.4억원의 비율인 0.24%를 참조하여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사전용역비 30억원을 산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하여 국내 원유 수입의 약 61%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향후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 여력을 여유 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축기지 증설이 필요함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이해됨.

다만, 2026년 현재 기준 한국석유공사의 전국 9개 기지의 비축역량은 총 1억 4,600만 배럴로 산업통상부가 가장 최근(2025년 12월)에 발표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상 2030년까지의 비축 목표량 1억 260만 배럴 대비 4,340만 배럴을 초과하는 수준임.

따라서 잔여 비축역량 4,340만 배럴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축역량 확보를 위한 비축시설을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과 함께 세부적인 비축기지 증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정 부담금 등 주요 세입 재원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예특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비축시설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산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에특회계): 석유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등 사업추진 철저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5432-302)은 석유 및 가스의 품질·유통관리를 통해 가짜석유를 차단하고,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163억 1,400만원 대비 223억 4,000만원(136.9%) 증액된 386억 5,400만원이 편성됨.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B-A)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5,859	15,859	16,314	38,654	22,340	136.9

자료: 산업통상부

② 석유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등 사업추진 철저 필요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석유통합관제센터’는 석유시장 불법행위 신고 창구 통합과 원스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석유통합관제센터를 한국석유관리원 내에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165억원이 순증되었음.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내역사업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예산안	비고
①가격/수급 통합시스템	데이터DB 통합, AI 인프라 구축	8,000	석유공사의 가격DB와 관리원의 수급 DB 등 각종 석유시장 정보를 통합 → 주유소 이상 거래 징후 조기 포착
②석유통합 콜센터	전국 단위 통합 민원 플랫폼	2,400	석유관련 민원 플랫폼을 일원화
③상황실 구축	관제 인프라	5,000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설비공사
④인건비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및 콜센터 운영	1,100	통합관제센터 인건비(30명) - 30명 × 55백만원 × 8개월/12개월
합계		16,500	

자료: 산업통상부

이 중 가격/수급통합시스템 구축비 80억원, 석유통합콜센터 플랫폼 구축비 24억원, 상황실 구축을 위한 설비공사 비용 50억원을 합한 154억원을 민간자본보조 비목으로 편성하였고, 데이터 관리·분석 및 콜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 소요 30명에 대한 8개월 분의 인건비 11억원을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편성하였음.

이와 같은 예산 편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번 중동 정세 불안 이후 오일콜센터(한국석유관리원 내 기존 품질·유통신고채널)를 석유 민원 채널로 일원화하여 임시로 비상 대응하고 있음에 따라, 석유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추가 인력 확충 및 인프라·플랫

품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한국석유공사의 가격DB와 한국석유관리원 수급 DB 등 각종 석유시장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분석하기 위해서 석유통합관제센터의 신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산업통상부는 데이터 관리·분석 및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력 소요를 30명으로 산출하고, 이들에 대한 4월 말 채용을 전제로 한 8개월 분의 인건비 11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하였음.

그런데 한국석유관리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6조제4항에 따라 증원 시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시 증원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말 기준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수시증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⁵⁷⁾ 또한, 수시증원 협의 이후에도 실제 직원 채

57)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6조(증원의 절차)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중장기 경영목표, 업무소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3년 단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정원조정안을 매년 5월 말까지 수립하고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인력의 재배치계획을 정원조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증원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증원 인력의 직급을 함께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령 제·개정, 정책상황의 변경 등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정원 조정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⑤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항 및 제4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용을 위해서는 채용공고 및 등록 등 충원에 따른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분기까지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통합관제센터의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3분기 이후부터 가격/수급통합시스템과 석유통합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조설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및 설비 구축 시기는 4분기 이후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2026년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계획

2분기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 수립
3분기	발주(입찰)·구조설계(가격/수급 통합, 석유통합콜시스템)
4분기	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개발 및 테스트 등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콜센터 설치에 따른 추가 인력 증원 소요를 재점검하고, 추경 확정 이후 채용을 통한 충원 절차와 함께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반영된 8개월분의 인건비가 연내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력활용계획을 수립,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부는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주유소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가격DB와 한국석유관

리원의 수급DB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가격/수급통합시스템 구축비로 80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음.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AI 기반 통합 플랫폼 및 가상화 서버 등 시스템 개발 사업비로 38억 2,000만원을 산정하였고, 대국민 홈페이지 개발 7억 2,500만원, 통합 인프라 구축비 34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음.

2026년 가격/수급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비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예산안
시스템 개발	AI기반 통합 플랫폼	2,851
	가상화 서버 등	969
대국민 홈페이지	개발 WEB, WAS 등	725
통합 인프라	보안소프트웨어 및 방화벽	1,530
	네트워크장비 구매	625
	스토리지 구매	1,300
합계		8,000

자료: 산업통상부

이는 석유 가격 및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거나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 주유소의 거래 정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AI 기반 체계를 추경 편성을 통해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업통상부는 2분기까지 석유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3분기부터 가격/수급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 및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이를 고려하면

통상 입찰공고 준비, 공고 기간,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에 통상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스템 개발 착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경안에 반영된 시스템 구축비의 연내 집행을 위하여 사업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통상 정부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 시 원칙적으로 ISP 및 ISMP를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ISP는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은 시스템 구축·재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과제별 추진 일정과 연차별·항목별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 ISP를 수립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 지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단순 기능개발, 단순물품구매, 총 구축비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재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ISP·ISMP 수립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ISP·ISMP 수립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ISP 또는 ISMP 중간산출물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 요구 이전에 ISP·ISMP를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산출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사업 계획 단계의 내실화 및 정보화분야의 투자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정보화 사업의 예산소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로 통용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격/수급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비 80억원(‘AI기반 통합 플랫폼’ 단일 시스템 구축비 28억 5,100만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ISP 수립을 거치지 않았고, 정보화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상 요구되는 ISP 중간 산출물 검토 요청 또한 2026년 3월 말 기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계획 및 요구기준, 세부 사양 등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연내 효과적인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처 소관

I. 개 요

1. 총 괄

(1) 편성배경

중동전쟁 등으로 글로벌 유가 및 물류비가 급등하여 수출기업의 어려움과 함께 민생 경제의 활력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에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2) 편성 기본방향

정부의 편성 기본방향은 ①고유가 대응, ②민생 안정, ③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며, 이에 지식재산처는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관련 1개 사업, 95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제1회 추경안 증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사업명	'25년 예산	'26년 본예산 (A)	'26년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
일반 회계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	-	9,500	9,500	순증
합 계		-	-	9,500	9,500	순증

자료: 지식재산처(총지출 기준)

2. 추경안 편성에 따른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1) 총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총수입 및 총지출 증감내역을 보면, 총수입은 변동이 없고, 총지출은 '26년 본예산 규모인 6,308억원 대비 95억원 (1.5%)이 증액되었음.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음.

제1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	'26년 예산			
		본 예산(A)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
총수입(전체)	645,885	701,827	701,827	-	-
일반회계	-	701,827	701,827	-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645,885	-	-	-	-

* 총수입기준 작성

자료: 지식재산처

제1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	'26년 예산			
		본 예산(A)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
총지출(전체)	556,595	630,825	640,325	9,500	1.5
일반회계	-	623,625	633,125	9,500	1.5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549,395	-	-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7,200	7,200	7,200	-	-

* 총지출기준 작성

자료: 지식재산처

(2)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는 총 95억원이 증액되었고, 해외에서 급증하는 K-Brand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여 수출기업의 매출 증가·일자리 창출·정부의 세수 확보 및 국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9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	'26년 본예산(A)	'26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
【일반회계】	-	-	9,500	9,500	순증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	-	9,500	9,500	순증

자료: 지식재산처

II. 검토의견

1.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일반회계): 정품인증 시스템의 보안성 관리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1531-308)은 정부 소유의 K-Brand 증명표장을 국내 및 해외에 등록하여 정부가 직접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단속·수사하는 등 ‘K-Brand 국가인증 표장’ 제도를 도입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에 95억원이 반영됨.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B)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	-	-	9,500	9,500	순증

자료: 지식재산처

②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중국, 동남아 등에서 K-Brand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⁵⁸⁾, 소송비용 부담, 현지 정부의 비협조로 인한 복잡한 대응 절차 및 낮은 손해배상액 등 개별 기업의 상표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58) K-Brand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2023년 기준 총 11조원으로 추산(OECD, '24)

K-Brand 위조상품 유형

위조상품 지재권 침해유형	실제 사례	
	정품(등록권리)	위조상품
① 정품의 상표 위조 (상표권 침해)	 등록상표	
② 정품의 외관 모방 (디자인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③ 정품의 외관·포장의 캐릭터, 표지 등 모방사용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자료: 지식재산처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기업 상표는 개별 기업의 권리로서 분쟁 대응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인식하에 해외 권리화 지원, 위조상품 모니터링, 침해 대응 컨설팅 등 기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사업은 정부가 상표의 직접 권리자인 K-Brand 증명표장을 국내 및 해외에 등록하여 국가 차원의 K-Brand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및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⁵⁹⁾, 특히 제품 생산지를 증명하

59)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는 해외 증명표장의 사례로는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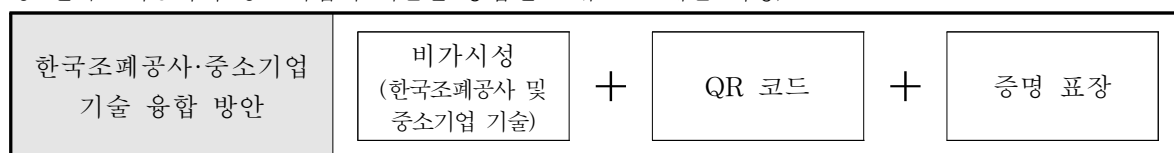
해외 인증상표 운영 현황

국가명	표장	인증주체	유효기간	인증기준
호주		민간협회	1년 (매년 재갱신)	· 호주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조·생산 비용의 50% 이상이 호주 내에서 발생해야 함
				· 중요한 원재료·구성요소의 원산지가 호주이며, 생산·제조 등 (거의) 모든 공정이 호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프랑스		민간협회	3년 (매년 정기검사)	·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프랑스에서 취득되고, 프랑스 내 생산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의 50% 이상일 것
				· 서비스 핵심 인력 90% 이상이거나 고객 접점 인력 90% 이상이 프랑스 내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되었을 것
영국		민간협회	1년 (매년 인증필요)	· 제조업 : 영국 내 제조시설에서 원재료의 실질적 변형·공정을 거친 제품을 생산
				· 소프트웨어 : 개발부터 유지보수 공정까지 영국 내에서 발생

자료: 지식재산처

일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 내 생산제품 및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제품에 K-Brand임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을 부여하고, 증명표장에 복제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정품인증기술⁶⁰⁾을 결합하게 되면,

60) 개별 제품별로 고유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육안식별 및 일반복사기로 복제 불가(2026년 상반기 중 한국조폐공사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융합한 고유코드 개발 예정)



자료: 지식재산처

해외 소비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한 정품 여부 확인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어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위조상품 유통 현황 모니터링 및 수사·단속을 위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침해대응의 측면에서 정부가 증명표장의 권리자이기 때문에 위조상품 유통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위조상품 유통 단속·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등 전 부처 간·국가 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부처별 대응 방안

지식재산처	▶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추진 (기존 국내수사→해외수사 공조) ▶ 해외IP센터를 활용, 현지기관과 합동 단속 추진 ▶ 해외 특허청 협의체(한-ASEAN, 한-중 등)를 통한 수사·단속 요청 ('25년 양자회의 33회 개최)
외교부	▶ 지재권 중점공관(25개所) 활용 및 정부간 회의에서 의제화
법무부	▶ 대량·상습 제조·판매자 대상 형사고소 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상 시 '지재권위원회' 신설, 통상 채널을 활용한 문제 제기
식약처	▶ 해외 화장품 규제당국과 국제회의(ICCR)·포럼(GCORAS) 등을 통해 대응 전략 공유
관세청	▶ 해외 세관과 침해물품 합동 단속 추진 및 통관 보류 협조 요청

자료: 지식재산처

궁극적으로 K-Brand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여 수출기업의 피해 예방 및 구제, 매출 증가, 이를 통한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내역

구분		정부안	산출 내역
국가 인증표장 국내·외 출원		2,800백만원	▶ 40백만원 × <u>70개국</u> - 해외 1개국 평균 출원 비용
해외 위조상품 추적 인프라 구축	정품인증기술 도입지원	3,500백만원	▶ 7원 x 10억개 x 0.5 - 기업 자부담율 50%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u>300백만원</u>	▶ 구축비의 20% - SW사업 대가산정기준
국내·외 홍보		2,500백만원	▶ <u>71개국</u> × 35백만원
전담기관 운영비	인건비	350백만원	▶ 10명 × 5백만원 × 7개월 - 학술연구용역단가기준
	사업운영경비	50백만원	▶ 여비·회의비 등
총계		9,500백만원	

자료: 지식재산처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2026년 추진 계획

상반기	▶ 증명표장 개발 및 인증기준 수립 등 표장 운영방안 마련 ▶ 증명표장 국내 출원·등록 ▶ 정품인증기술 적용방안 마련
하반기	▶ 해외 70개국에 증명표장 출원 및 <u>정품인증시스템</u> 구축 ▶ 기업 대상 홍보 및 <u>시범사업 실시</u> ▶ 참여기업 모집 및 위조방지기술 적용을 위한 생산공정 변경

자료: 지식재산처

첫째, 지식재산처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품인증시스템 운영 사업의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고 2026년 하반기 내 정품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인데,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 전산망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점⁶¹⁾을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정품인증시스템을 해킹당하는 경우 해외 수출기업의 기업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한국조폐공사 및 기술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비가시성 고유코드가 파훼·복제될 우려도 있으며,

해외 소비자가 위조상품에 붙은 위조 QR코드로 정품 여부를 확인했을 때 정부 운영의 정품인증시스템이 아닌 이와 거의 유사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여 마치 정품 K-Brand인 것처럼 해외 소비자를 속이는 이른바 큐싱⁶²⁾ 방법이 시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품인증시스템의 보안성과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임.

둘째, ‘국내·외 출원’ 및 ‘국내·외 홍보’ 비용 관련 산출 내역을 보면 주요 수출국인 71개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사업 실시를 예정하고

61) 파이낸셜뉴스, “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25.9.9.

62) 큐싱: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QR코드를 통해 악성 웹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사이버 금융사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외 홍보 사업 추진 계획

국내	▶ K-컬처 복합 전시공간 홍보(코엑스, 팝업스토어/중기제품 전시·체험) ▶ 정부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문체부) ▶ 주요 소비재 기업, 유관기관과 공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산업부 등)
해외	▶ 해외 영상플랫폼 방영 지원, K-굿즈 전용관 홍보(문체부) ▶ K-pop스타를 활용한 해외 방송 매체 및 SNS 등 홍보(지재처) ▶ 한류 박람회 및 해외 공관 등을 통한 홍보(산업부, 외교부 등)

자료: 지식재산처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K-Brand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이 심각한 국가에서부터 빠르게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동 사업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국가와 추후 저변을 확대할 국가를 나누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지식재산처는 품질 기준⁶³⁾을 충족하는 한국 내 생산제품에 증명표장을 부여하되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제품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인증은 기업의 자율 선택으로서 미인증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은 없으며, 현재 식품·뷰티·패션 등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K-Brand 증명표장의 적용 의사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데 다수의 기업이 적용을 희망한다고 설명함.

63)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품질 기준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인증 기준(KS, HACCP 등)을 활용하고, 그 외 패션·엔터사 굿즈 등 순환주기가 짧은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소관부처의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추천하는 제품도 포함할 예정임.

그런데 만약 K-Brand 증명표장 제도가 활성화되면 K-Brand 증명표장은 제품의 진위 및 품질을 증명하는 강력한 효과를 갖게 되므로 같은 제품일 경우 K-Brand 증명표장이 없는 제품보다 있는 제품이 우선적으로 해외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되고,

반대로 기업의 사정으로 품질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 사업의 예산상 한계로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력 저하로 해외 매출 감소 등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으며, 이는 K-Brand 증명표장 여부가 기업의 자율 선택이라고 한 지식재산처의 설명과는 달리 사실상 강제적 또는 특혜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동 사업의 대상 제품 및 기업을 매년 다르게 하는 등 K-Brand 증명표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증명표장 대상 선정을 받지 못한 기업은 유사 사업인 ‘K-Brand 분쟁대응 지원(1531-304)’ 대상 선정에 우선 배려를 받도록 하는 등,

동 사업으로 말미암아 기업 간 공정 경쟁이 저해되어 손해를 입는 기업이 없도록 세심한 사업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지식재산처는 ① 정품인증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② 사업 추진의 집중도 또는 비용 투자를 국가별로 전

략적으로 배분하며, ③ 동 사업으로 인해 기업 간 공정 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